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음 8월 19일) 제23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푸른 가을하늘 아래 전주시 풍경



맑은 하늘을 보인 16일 전북도청에서 바라본 전주 시내 전경이 푸른 하늘과 더불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총력'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추진·소스산업화센터 준공 등 도, 글로벌 식품시장 중심 도약 위한 기능보강에 집중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8년 익산으로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6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전과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2018년 3월에 산업단지를 완공했고, 그동안 6대 지원시설 구축에 1058억원, 70만평의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에 민자 2298억원 등 2020년까지 5535억원 투자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식품 전문 산업단지 분양은 78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상 115만18000㎡중 55만9000㎡로 분양률은 48.2%이며, 28개 기업이 공장을 신축 완료하여 가동 중이다.

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대통령 지역공약 1호로 발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능성 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 안전센터, 패키징센터에서 기업과 공동연구 및 애로기술 컨설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GMP(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인증)를 획득한 시험생산시설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제품 생산 전에 시제품을 생산해보고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제품 생산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식품벤처센터는 창의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 및 생산시설·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품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청년(만39세 미만) 등 식품 창업 희망자에게 시설·장비를 무상지원(3개월)해주는 사업으로 식품분야 성공 창업을 위해 식품제작을 기획부터 시제품 생산,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총괄 운영·관리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 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됐다.

아울러,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 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중복적인 명칭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비 부담이 올해부터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 보조·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6대 기업지원시설 이외에도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의 소스 전문 지원기관으로 102억원을 투자해 올해 8월 준공하고 시범 가동 중이다.

도 관계지는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산업단지 분양 추진과 산업단지 확장 필요성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 도약 하기 위해 복합 푸드랜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복지문화센터 등 기능보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역에너지 전환 위해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전환 전시·토론회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에너지
 분권 과제·방향 주제 발제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 토론회서 제언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및재생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신창현 의원, 김성환 의원,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부회장이 김승수 전주시장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 홍준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로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지리지인 3040’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운영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플랫폼 구축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에너지전환박람회 개최 △초록도시공모전 등 그간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수입 의존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 및 지방정부의

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계로 지적하고,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재정지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지립과 지역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수 시장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 지원,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권한과 재정권한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이신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송효철 기자

그리고 여유...
 여기가 무주네!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